

사회관계장관회의	
회 차	2021 - 4 (3호)
안전유형	심의

---

#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

---

2021. 2. 24.



# 차 례

I. 추진배경 및 경과 .....	1
II. 2020년도 추진실적 .....	2
가. 주요 추진성과	
나. 과제별 추진실적	
다. 문제점 및 보완 필요사항	
III. 2021년도 추진계획 .....	7
가.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획기적 개선	
나.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	
다.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 정착	
라. 어린이보호구역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	
마.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의무 강화	
IV. 과제관리 계획 및 주요 추진일정 .....	11

[붙임] 「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」 세부 추진과제

# I. 추진배경 및 경과

## □ 추진 배경

- 어린이보호구역내 횡단보도 사망사고(故김민식군, '19.9.)를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\* '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' 마련('20.1.)  
\* 행안부, 교육부, 국토부, 복지부, 문체부, 경찰청 등 6개 부처
- 지난 1년간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 및 보호구역내 운전자 운전행태 개선 성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\*  
\* 전북 전주(2세 男 사망, '20.5.21), 부산 해운대(6세 女 사망, '20.6.16), 광주 북구(2세 女 사망, '20.11.17)
- 대책의 효과성·이행력 제고를 위해 세부 과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개선·보완 추진

## □ 추진 경과

-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마련·발표('20.1월)
- '20년 이행계획 마련('20.3월) 및 추진상황 점검('20. 5월, 8월, 12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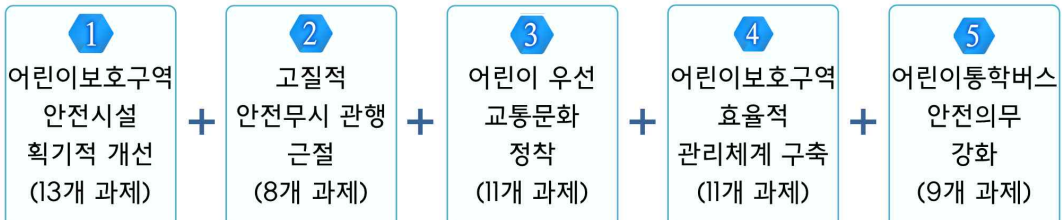
### <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('20~'24) 개요 >

#### 목표

- (1단계) 2022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'제로화'  
▶ ('17년) 8명 → ('18년) 3명 → ('19년) 6명 → ('20년) 3명 → ('21년) 2명 → ('22년) 0명
- (2단계) 2024년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 'Global Top 7' 수준으로 감축  
▶ 어린이 인구 10만명당 어린이 사망자수 : ('16년) 1.1명(OECD 21위) → ('24년) 0.6명(OECD 7위)

#### 주요 과제

#### ■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획기적 개선 등 5대 분야 52개 세부과제 마련



- 2022년까지 30개 세부과제 마무리(58%), 2024년까지 22개 세부과제 마무리(42%)

## II. 2020년도 추진실적

### 가. 주요 추진 성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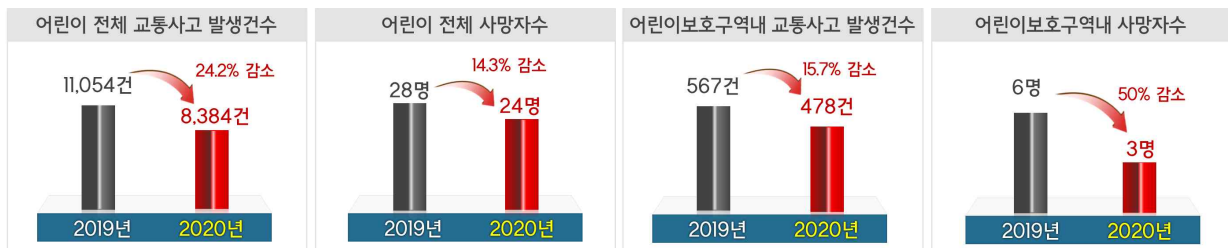
#### □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

- (어린이 전체) 전년 대비 교통사고 건수 24.2%, 사망자 14.3% 감소

※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8.6%('19년 229,600 → '20년 209,967건), 사망자는 8.1% 감소('19년 3,349 → '20년 3,079명)

- (어린이보호구역) 전년 대비 교통사고 건수 15.7%, 사망자 50% 감소

※ 서울시 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 45.6%(114건→62건), 사망자 2명→0명으로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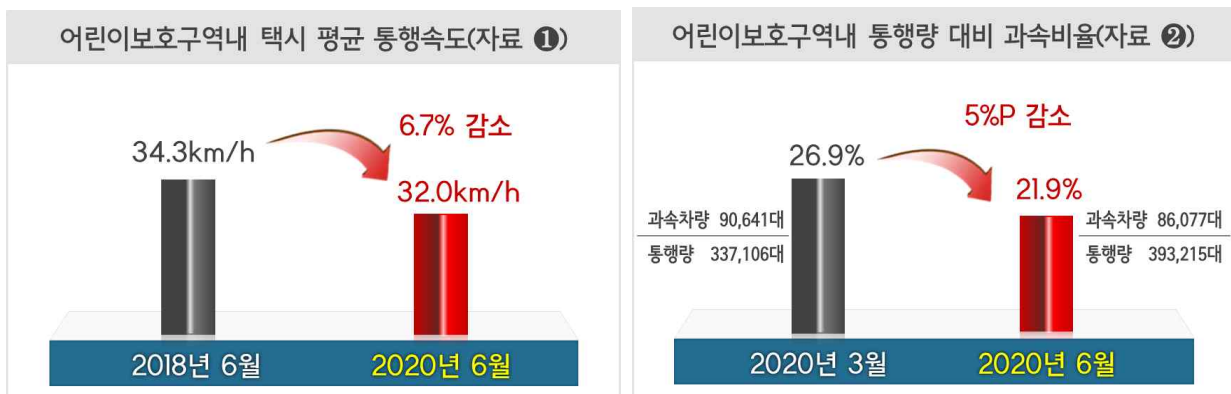


※ 자료출처 : 경찰청 통계('21.2월)

#### □ 어린이보호구역내 운전자 운전행태 개선

- (통행속도) 통학시간대 보호구역내 평균 통행속도 6.7% 감소

- (과속비율) 보호구역내 통행량 대비 과속비율 5%P 감소



※ (자료 ①) 한국교통안전공단 분석결과('20.12월) / 서울시 1,400여개 보호구역내 도로를 대상으로 택시의 운행 기록 자료 활용, 민식이법 시행 이전('18년 6월)과 이후('20년 6월) 통행속도 분석(통학시간대 6~9시, 12~15시)

(자료 ②) SK텔레콤 내비게이션(T map) 데이터 분석결과('20.9월) / 전국 보호구역내에서 과속 건수가 가장 많았던 10곳을 대상으로 민식이법 시행 이전('20.3월)과 이후('20.6월) 통행량 대비 과속건수 분석

□ 제도·시설개선 등 대책의 주요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

○ (추진현황) 52개 세부과제 중 15개 과제 완료, 37개 과제 정상 추진 중

구분	계	제도개선	시설개선	홍보·교육	운영·관리
계	52	13	7	12	20
'20년 완료	15	6		2	7
'21~'22년 완료	15	7	4	2	2
'23~'24년 완료	22		3	8	11

○ (주요 완료과제) 주·정차, 통학버스 제도·운영 관련 과제 우선 완료

- 제도 개선 : 불법 주·정차 범칙금·과태료 상향(일반도로의 2배→3배), 통학버스 신고의무대상 확대(6종→18종), 통학버스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의무화 등
- 홍보·교육 : 내비게이션 캠페인(어린이 음성 탑재, 제한속도 지키기), 어린이 교통안전 슬로건\* 제작·홍보(슬로건 선포식,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) 등
  - \*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선정(1단 멈춤! 2쪽 저쪽! 3초 동안! 4고 예방!)
- 운영·관리 : 보호구역내 불법 노상주차장 폐지(281개소), 안전신문고 활용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(6.29 시행) 등

○ (시설 확충) 설치수요, 사업효과가 높은交通安全시설 집중 설치

주요 지표	2019년	2020년
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율 (전국 보호구역 16,912개소)	5.6% (952개소)	19.1% (3,222개소) ※ '20년 2,270개소 2,602대 설치
교통신호기 설치율 (보호구역내 횡단보도 35,892개소)	38.4% (13,765개소)	41.8% (14,990개소) ※ '20년 1,225개소 설치
보도 없는 초등학교 수 (전국 초등학교 6,087개교)	991개교 (16.3%)	938개교 (15.4%) ※ '20년 학교부지 활용 등 53개교 개선
옐로카펫 설치개소	1,916개소	2,336개소 (+420개소)
불법 주·정차 단속장비 설치개소	2,094개소	2,471개소 (+377개소)

## 나. 과제별 추진실적

### ①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획기적 개선

- (단속장비 등 설치) 보호구역내 무인교통단속장비(2,602대, 과속·신호 위반), 신호기(1,225개소) 설치(행안부, 교육부, 경찰청)  
※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세부기준 마련·시행(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, '20. 3. 25)
- (속도하향) 제한속도 30km/h 초과 구간(889개소), 속도하향 조정\*(경찰청)  
\* 671개소는 30km/h로 조정하고, 218개소는 차량소통 등을 고려 기존 속도 유지(기존 속도 유지구간은 단속장비 설치 등 안전 조치 추진)
- (통학로 확보) 학교 부지 활용 등을 통한 통학로 설치(53개교, 행안부), 학교내 보·차도 미분리 구간 보행로 확보(1,946개교, 교육부)  
※ 등·하교 시간대 시간제 차량통행제한도 적극 도입(8개 시도 238개교)
- (식별성 강화) 보호구역 식별성 강화를 위한 옐로카펫 확대(420개소), 효율적 보호구역 정비를 위한 표준모델 마련(행안부, 교육부)
- (도로外 구역 관리) 아파트단지, 주차장 등 도로外 구역 안전관리 강화\*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·시행(6월 주차장, 11월 아파트 단지내 도로/국토부)  
\* 교통안전점검 시행, 시설 설치·관리 기준 마련, 설치·관리자 의무 강화 등

### ②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

- (노상주차장 폐지) 어린이 시야가림 방지를 위해 보호구역내 불법 노상주차장(281개소) 모두 폐지('19.7.~'20.12월/행안부)  
※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공급 확대 병행(294개소, 36,685면)
- (주민신고제 도입)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·정차 주민신고제 시행(6월/행안부) ※ '20년 47,205건 신고('20.6.29~12.31/일평균 254건)
- (과태료 등 상향) 보호구역내 주·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·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\*(11월/경찰청)  
\* (현행) 일반도로(승용차 기준) 4만원, 보호구역 8만원 → (개정) 보호구역 12만원 / '21.5.11 시행

### ③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 정착

- (교육 강화) 노인 일자리 사업 연계, 등·하교 교통안전 계도 활동 확대\* 및 등·하굣길 교통안전 프로그램(Walking school bus) 활성화\*\* (복지부, 교육부)
  - \* '22년까지 전체 초등학교(6,000여개, 학교당 6명)로 확대 / '18년 13천명 → '19년 19천명 → '20년 27천명 → '22년 36천명
  - \*\* 워킹스쿨버스 홍보 동영상 제작 및 시범학교 운영(51개교)
- (홍보 확대) 내비게이션 앱을 통한 보호구역 안전홍보\*(4월) 및 제한속도 지키기 캠페인(8월), 공익광고(운전자가 보호자) 제작·송출(8월/행안부, 경찰청)
  - \* 어린이 음성을 통한 보호구역 안내, 보호구역 보호경로(우회경로) 안내 등
- (참여 활성화) 어린이 교통안전 슬로건 선포식 및 사회공헌활동 업무 협약 체결\*(9월),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추진\*\* (12월/행안부)
  - \* 행안부, 교육부, 경찰청, 현대차, SK텔레콤, 메르세데스-벤츠코리아, DB손해보험 등 13개 기관 대표 협약
  - \*\*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, 안전문화운동협의회 민간위원장을 시작으로 공공기관과 시민단체로 확산 / 2달 동안 820여명 참여(지자체 단체장 140명, 국회의원 37명, 지방의회의원 150명, 경찰·소방서장·교육장 158명 등)

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	전주시장	국회 행안위원장	서울시 교육감	전북경찰청장
				

### ④ 어린이보호구역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

- (협업 강화) 지역 단위 교통안전 유관기관간 협업강화를 위해 지역 교통안전협의체 활성화(전국 243개 지자체 구성, 84회 개최 / 행안부, 경찰청)
- (업무 효율성 제고) 체계적 보호구역 정비를 위한 중장기 시설개선 계획 마련,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\*(12월, 행안부)
  - \* 보호구역 기본현황, 시설물 현황, 위치 정보 등을 지도상에 입력·관리
- (연구개발 및 진단 확대) 어린이 교통안전 연구개발(R&D) 확대\* 및 교통사고다발 보호구역 진단·정비\*\* (행안부, 교육부, 경찰청)
  - \* 스마트 도로조명 플랫폼 구축('19.~'23년), 스마트 보호구역 구축을 위한 통합안전기술개발('21.~'23년)
  - \*\* 관계기관 합동,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진단 및 정비(7.~9월, 52개소)

## 5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의무 강화

- (관리 사각지대 해소)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 확대\* (경찰청, 문체부)  
\* (현행) 5개 법률 6종 시설 → (변경) 11개 법률 18종 시설 / 도로교통법 개정(5.26), 시행(11.27.)
- (합동 점검) 관계기관 합동 통학버스 안전점검\* 시행(상·하반기 / 경찰청)  
\* 미신고 운행, 차량장치 미비 등 확인 / 상반기 1,202건, 하반기 942건의 과태료 부과·정비명령 등 조치
- (승하차 구역 도입) 보호구역내 통학버스 승하차 구역 도입 추진\* (경찰청)  
\* 보호구역에 안전표지로 구역·시간·방법 등을 정하여 주정차 허용(도로교통법 제34조의2 개정/ 12월)

### 다. 문제점 및 보완 필요사항

#### □ 부적합한 안전시설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필요

- 보호구역내 안전시설 설치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침에 맞지 않거나 노후·방치되는 시설물이 많은 실정  
※ (언론보도사례) 어린이보호구역 '엠티리' 노면표시 - 속도제한 없거나 훼손 심각, 서울시내 10개 중 3개 문제('21.1월)
- 부적합한 시설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고,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규명 등 분쟁 소지 상존

#### 보완필요

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시설물 적정성 평가 등 공인제도 도입 검토(보호구역 인증제)  
▶ (사례) 무인교통단속장비 인수검사(최초 설치), 정기검사(1년 단위)

#### □ 불법 주정차 등 안전무시 관행 빈번, 적극적 어린이 보호조치 부족

- 보호구역은 운전자에게 특별한 안전의무가 부여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 주정차 관행 빈번  
※ (언론보도사례)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여전('21.2월) / 민식이법 시행 반년... 주변 골목민원 200배 증가 갈등 속출('20.10월)
- 행정기관에서도 주민 불편, 민원을 우려해 단속 강화, 노상주차장 폐지, 안전시설물 설치 등 적극적인 어린이 보호조치 부족

#### 보완필요

주정차 방지시설 확대, 공영주차장 확충, 국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적 홍보 확대



# Ⅲ. 2021년도 추진계획

## 목표 및 중점 추진방향

### 목표

-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**2명 이하**로 감축  
 > ('17년) 8명 → ('18년) 3명 → ('19년) 6명 → ('20년) 3명 → ('21년) 2명 → ('22년) 0명
- 어린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 **20명 이하**로 감축  
 > ('17년) 54명 → ('18년) 34명 → ('19년) 28명 → ('20년) 24명 → ('21년) 20명 → ('22년) 18명

### 중점 추진 방향

기존 대책 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기조로 여건 변화에 따른 일부 과제 보완 추진

- **(제도개선)** 어린이 보행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법령(도로교통법) 우선 개정  
 >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, 보행자 통행 우선권, 도로외 구역 보행자 보호 의무, 보호구역 지정대상 확대 등
- **(시설개선)** 보호구역 식별성 강화사업 중점 추진,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확대  
 > 표준모델 시범사업(29개소), 옐로카펫 설치(900개교), 보호구역 전용 교통안전시설 도입 등
- **(홍보·교육)**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유관기관, 민간기업 공동 홍보·교육 확대
- **(운영·관리)** 교통안전시설 안전성 제고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인증제 도입

### 주요 지표

주요 지표	2019년	2020년	2021년
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율 (전국 보호구역 16,912개소)	5.6% (952개소)	19.1% (3,222개소)	43.6% (7,369개소) ※ '21년 4,147개소 5,529대
교통신호기 설치율 (보호구역내 횡단보도 35,892개소)	38.4% (13,765개소)	41.8% (14,990개소)	51.0% (18,320개소) ※ '21년 3,330개소
보도 없는 초등학교 수 (전국 초등학교 6,087개교)	991개교 (16.3%)	938개교 (15.4%)	906개교 (14.9%) ※ '21년 32개교
옐로카펫 설치개소	1,916개소	2,336개소 (+420개소)	3,236개소 (+900개소)
불법 주·정차 단속장비 설치개소	2,094개소	2,471개소 (+377개소)	4,794개소 (+2,323개소)

## 가.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획기적 개선

- (단속장비 등 설치) 보호구역내 무인교통단속장비(5,529대, 과속·신호 위반), 신호기(3,330개소) 설치(행안부, 교육부, 경찰청)
  - ※ '22년까지 필요한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 목표(설치율 60%)
- (통학로 확보) 학교 부지 활용 등을 통한 통학로 설치(32개교, 행안부), 학교내 보·차도 미분리 구간 보행로 확보(1,110개교, 교육부)
  - 도로 주변에 위치한 건물 등으로 별도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구간은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 부여(도로교통법 개정, 경찰청)
    - ※ 제한속도를 현행 30km/h에서 20km/h이하로 강화 적용 병행
- (식별성 강화) 보호구역 식별성 강화를 위한 옐로카펫 확대(900개소), 정비 표준모델 정착·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(29개소/행안부, 교육부)
  - 과속방지턱\*, 시·종점 노면표시\*\* 등 시설기준 보완(국토부, 경찰청) **[신규]**
    - \* 현행 볼록렌즈형을 싸인커브형으로 개선(완만한 주행유도, 차륜 충격도 감소 등)
    - \*\*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명확한 표시 필요성에 따라 시·종점 노면표시 기준 마련



- (어린이 보행공간 보호) 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확대\*, 아파트 단지 등 도로外 구역 보행자 보호의무 신설(도로교통법 개정, 경찰청)
  - \* 보호구역 대상시설에서 어린이의 집까지 주요 도로를 통학로로 지정

## 나.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

- (보행자 우선제도) 보호구역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서행하도록 의무 부과(도로교통법 개정, 경찰청)
- (불법 주·정차 관리) 강화된 주·정차 규제\*에 따라 보호구역 전용 교통안전시설\*\* 도입 추진(경찰청) **[신규]**
  - \* 주·정차 금지구역에 어린이보호구역 추가(도로교통법 '21.10월 시행), 어린이 보호구역내 노상주차장 폐지 의무화(주차장법 '21.7월 시행)
  - \*\* 보호구역 전용 노면표시, 주·정차 금지선 및 황색 횡단보도 등
- 초등학교 주변 필요지점\*에 주·정차 단속장비 설치완료(행안부)
  - \* 불법 주정차 빈도가 높은 구간 2,323개소 설치('18년 실태조사 결과)
- (주차환경 개선) 보호구역내 노상주차장 폐지 등에 따른 주차난 해소와 국민 편의 증대를 위해 공영주차장 공급\* 확대 추진(국토부, 행안부)
  - \* 국토부 주차장환경개선사업 연계('21년 290개소 건설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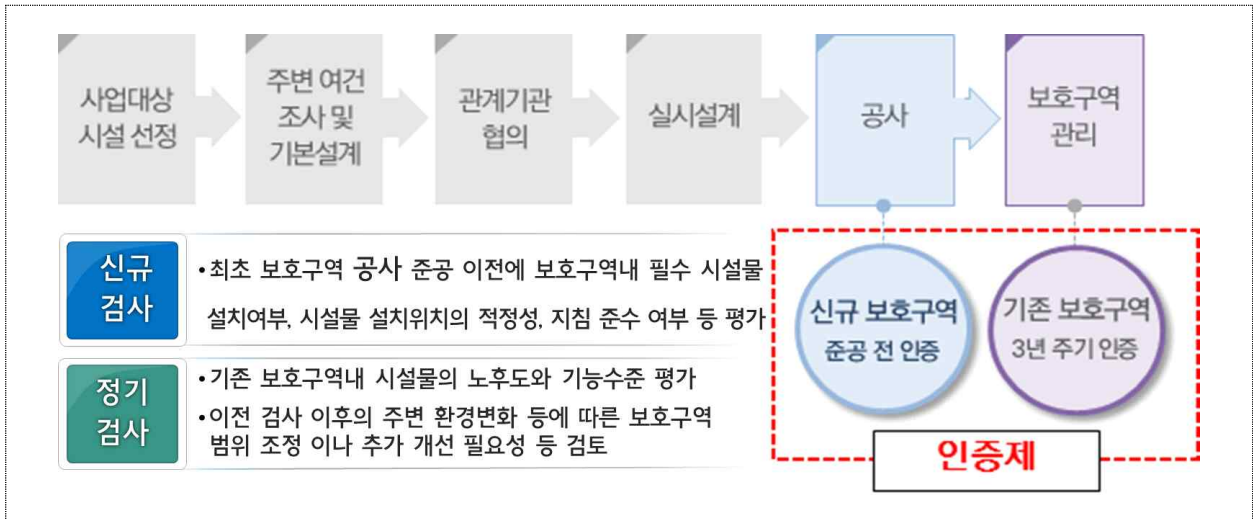
## 다.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 정착

- (어린이 교육) 노인 일자리\* 사업 연계, 등·하교 교통안전 계도 활동 확대\* 및 등·하굣길 교통안전 프로그램 활성화(80개교 대상/복지부, 교육부)
  - \* '22년까지 전체 초등학교(6,000여개, 학교당 6명)로 확대 / '19년 19천명 → '20년 27천명 → '21년 33천명 → '22년 36천명
- (운전자 교육)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 의무교육과정\*에 '어린이 등 교통약자 교통안전 제고방안' 관련 교육내용 추가(경찰청)
  - \* 면허시험장(교통안전교육 1시간) / 전문학원(학과교육 3시간, 장내기능교육 4시간, 도로주행교육 6시간)
- (참여 활성화) 기업의 사회공헌활동\*과 연계, 공동홍보 확대(행안부) **[신규]**
  - \* 현대차, SK텔레콤,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, DB손해보험, 초록우산어린이재단, 아이들과 미래재단, 손해보험협회 등 / 옐로카펫 등 설치지원, 내비게이션 캠페인, 영상물 제작 등

## 라. 어린이보호구역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

- **(인증제 도입)** 보호구역내 안전시설 설치 적정성 제고, 체계적 개선·정비를 위한 **보호구역 인증제\*** 도입(행안부, 경찰청) **[신규]**

\* 어린이보호구역내 도로·교통안전시설물의 지침 준수 및 설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정기적으로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



- **(통학로 관리)** 학교주변 공사시 통학로 안전확보 실효성 제고를 위해 ‘교육시설법’ 안전성평가 제도 활용 검토\*(교육부) **[신규]**

\* 통학로 안전관리 계획을 반영한 ‘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고시’ 마련 중

## 마.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의무 강화

- **(통학버스 관리)** 유치원·학교·학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노후 통학버스(차령 11년 이상) 교체 추진(교육부) **[신규]**
- **(승하차 구역 도입)** 통학버스 승하차 구역 관련 주·정차 허용기준 및 필요구간 등 세부 운영계획 수립(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, 경찰청)
- **(합동 점검)** 관계기관 합동 통학버스 안전점검 시행(상·하반기 /경찰청)

※ 통학버스 운영시설 대상 개정 등 도로교통법 시행(‘20.11.27)에 따라 개정 제도 교육 및 홍보 추진 병행 / 학원운영자 연수교육시 경찰관 파견 안전교육 실시

## IV. 과제관리 계획 및 주요 추진일정

### □ 과제관리 계획

- 대책 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 관리를 위해 점검협의회 구성·운영
  - (구성) 행안부 주관, 관계부처\* 및 17개 시도 참여
    - \* 교육부, 국토교통부, 보건복지부, 문화체육관광부, 경찰청
  - (운영) 분기별 이행실적 점검(필요시 수시), 반기별 합동 현장점검
    - ※ 대책 발표 이후, 협의회 구성('20.1월) / '20년 대면회의 1회(5월), 서면회의 2회 개최(8,12월)

### □ 주요 추진일정

- '20년도 추진실적 및 '21년도 추진계획 관계기관 통보 : '21.2월말
- 신학기 학교주변 현장점검 : '21. 3. 2. ~ 3. 19.(3주간)
  - 저학년(1~2학년) 등교 개학에 따른 관계기관 합동\* 현장점검 추진
    - \* 행안부, 교육부, 경찰청, 지자체, 교육청, 경찰서 등
  - 관계기관 장·차관 안전점검 참여 등 현장 소통 강화
- '21년 추진계획 과제별 이행실적 점검 : 분기별(4, 7, 10, 12월)
- '21년 교통안전시설 설치 현장점검 : 반기별(6, 12월)
- 현장 실행력 확보를 위한 홍보 강화 : 연중
  - 법령 개정, 새로운 제도 시행\* 등 추진단계에 맞춰 집중 홍보
    - \* 불법 주정차 과태료·범칙금 상향('21.5월), 통학버스 승하차 구역 도입('21.6월), 어린이보호구역 인증제 도입('21.下) 등

과 제 명		추진유형	추진부처	추진일정				
				'20	'21	'22	'23	'24
<b>1.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획기적 개선</b>								
①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확대	① 무인교통단속장비 및 신호등 설치	시설	행안부, 경찰청, 교육부, (지자체)	■	■			
	② 보호구역내 모든 도로의 제한속도 30km/h로 하향 (완료)	운영	경찰청	■				
② 통학로 설치 등 어린이 등하굣길 보행안전 확보	① 학교부지 활용 통학로 설치사업 추진	시설	행안부, 교육부, (지자체)	■	■	■	■	■
	② 제한속도 20km/h로 하향, 보행자 통행 우선권 부여	시설, 운영	행안부, 경찰청	■	■			
	③ 교내 보차도 미분리 구간에 안전 보행로 마련	시설	교육부	■	■			
	④ 시간제 차량통행제한 적극 도입	운영	행안부, 경찰청, (지자체)	■	■	■	■	■
③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 개선 및 확산	①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 개선 (완료)	운영	행안부, 경찰청	■				
	② 시설 등 설치기준 보완	제도	국토부, 경찰청	■	■			
	③ 표준모델 시범사업 추진	시설	행안부		■	■	■	■
④ 보호구역 지정개선	① 보호구역 지정대상 추가	제도	경찰청, 행안부	■	■			
	② 보호구역 지정확대	제도	행안부	■	■			
⑤ 도로외 구역 안전관리 강화	① 도로외 구역 개정 법률 관련, 하위법령 등 개정 (완료)	제도	국토부	■				
	② 도로외 구역 보행자 보호 의무 등 신설	제도	경찰청	■	■			
<b>2.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</b>								
① 어린이 보행자 보호 및 법규 위반 처벌 강화	① 보호구역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서행의무 부과	제도	경찰청	■				
	② 보호구역내 주·정차 위반 차량 범칙금·과태료 상향 조정 (완료)	제도	경찰청	■	■			
	③ 보호구역 경찰관 추가 배치	운영	경찰청	■	■	■	■	■

과 제 명		추진유형	추진부처	추진일정				
				'20	'21	'22	'23	'24
② 보호구역내 불법 노상 주차장 폐지 및 주민신고제 도입	① 불법 노상주차장 폐지 (완료)	운영	행안부, (지자체)	■				
	② CCTV 등 불법 주·정차 방지시설 설치 확대	시설	행안부, (지자체)	■	■	■		
	③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 (완료)	운영	행안부, 경찰청	■				
③ 주차수요를 고려, 주차환경 개선 지원	① 공영주차장 확충	시설	국토부, 행안부, (지자체)	■	■	■		
	② IoT 주차공유제 확대	시설	행안부, (지자체)	■	■	■	■	■
<b>3.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 정착</b>								
① 어린이 등·하교 교통안전프로그램 활성화	① 등·하굣길 교통안전교육 활성화	교육	행안부, 교육부, (지자체)	■	■	■	■	■
	② 일자리 연계, 등·하교 교통안전 계도활동 확대	교육	복지부, (지자체)	■	■	■	■	■
② 체험교육 확대 등 교통안전교육 내실화	① 교육자료 개발·보급	교육	교육부	■	■	■	■	■
	② 체험교육 확대	교육	교육부, (지자체)	■	■	■	■	■
	③ 아동안전지도 프로그램 도입	교육	교육부, 행안부, (지자체)	■	■	■	■	■
③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강화	① 운전면허 교육과정 추가	교육	경찰청	■	■	■		
	② 예비군 교육 등 활용, 교통안전교육 실시	교육	경찰청, (지자체)	■	■	■	■	■
	③ 고위험 운전자 안전교육 강화	교육	경찰청	■	■	■		
④ 민·관 협업을 통한 보호구역 홍보 확대 및 대국민 인식 제고	① 운전자 의식 제고를 위한 내비게이션 캠페인(완료)	홍보	행안부	■				
	②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슬로건 제작(완료)	홍보	행안부, 문체부, 국토부, 경찰청	■				
	③ 어린이보호구역의 날 지정·운영	홍보	행안부, 교육부, 경찰청	■	■	■	■	■
<b>4. 어린이보호구역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</b>								
① 지자체,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교통안전정책 추진	① 지역교통안전협의체 활성화	관리	행안부, 경찰청, (지자체)	■	■	■	■	■
	② 학교안전대책협의회 운영	관리	행안부, 교육부, (지자체)	■	■	■	■	■
	③ 지자체 어린이 안전 평가체계 도입	관리	행안부	■	■	■	■	■
	④ 주민참여 확대	관리	행안부, (지자체)	■	■	■	■	■

과 제 명		추진유형	추진부처	추진일정				
				'20	'21	'22	'23	'24
[2] 시설개선 중장기 계획 마련 및 전국 단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	① 보호구역 안전시설 전수 실태조사	관리	행안부, 경찰청	■	■			
	②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(완료)	관리	행안부	■				
	③ 중장기 시설개선계획 수립(완료)	관리	행안부, 기재부	■				
[3] 어린이 교통안전 R&D 확대	① 보호구역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R&D 확대	관리	행안부, 경찰청, 국토부	■	■	■	■	■
	② 스마트 보행안전 환경 구축	관리	행안부	■	■	■	■	■
[4] 보호구역 안전진단 확대 및 신호운영체계 개선	① 사고다발 보호구역 정비	관리	경찰청, 행안부	■	■	■	■	■
	② 점멸신호 운영체계 개선(완료)	관리	경찰청	■				
<b>5. 통학버스 안전의무 강화</b>								
[1]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 확대 등 관리 사각지대 해소	① 신고의무대상 확대(완료)	제도	경찰청, 문체부	■	■	■	■	■
	② 신고 체육시설에 체습교습업 신설(완료)	제도	문체부	■				
[2] 통학버스 관계자 안전인식 제고	① 통학버스 운영 교육시설 일제점검 실시	관리	경찰청, 교육부, 문체부, 복지부	■	■	■	■	■
	② 경찰관 방문 교통안전 교육 실시	교육	경찰청	■	■	■	■	■
	③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의무화(완료)	제도	경찰청	■	■	■		
[3] 안전의무 위반에 대한 지도·단속 및 처벌 강화	① 통학버스 특별보호규정 위반행위 단속	운영	경찰청	■	■	■	■	■
	② 통학버스 관련 의무 위반사항 처벌 강화(완료)	제도	경찰청	■				
[4] 통학버스 승하차구역(drop zone) 도입	① 통학버스 승하차구역 도입 검토	제도	경찰청	■	■			
	② 승하차구역 세부 운영 매뉴얼 마련	관리	경찰청, 행안부	■	■			